

□ 확산 일로의 북핵 위기, 어디로 가나?

1. 북미 대립 속에 북핵 위기 확산

○ 6자회담 중단 1년을 앞두고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에 대해 미국도 UN 안보리 회부 시사 등의 강경책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북핵 위기는 '말 對 말'에서 '행동 對 행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북한) 핵 보유 선언과 5MW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 폐 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

- 북한은 외무성 성명의 핵 보유 및 6자회담의 무기 불참을 선언(2. 10)한 데 이어, 김정일 위원장과 왕자루리(王家瑞) 중국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3. 1)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시인하였음
- 이를 토대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도 핵 보유국인 만큼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의 핵 문제 협의와 '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3. 31)을 주장함
- 4월에 들어서서는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 폐 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음
- 북한의 의도는 핵 보유를 통한 군사력 강화도 있겠지만, 위기 고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보장과 보다 많은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협상력 제고' 목적의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평가됨
- 특히, 부시 2기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 및 위기 의식과 함께, 향후 4년간 지속될 국제적 고립과 대외 경제 지원 축소를 벗어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미국)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 보도 이후, 미국은 연초의 대북 적대감 표현 자제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시사와 김 위원장에 대한 직설적 비난 발언 등의 강경 분위기로 선회함

- 백악관 대변인과 라이스 장관에 이어 부시 대통령도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특히,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발언 취소를 회담 재개 조건 중의 하나로 요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 위

- 원장에 대해 ‘폭군’(tyrant)과 ‘위험한 사람’(dangerous person)이라고 호칭함
 - 이는 그동안의 중동 평화 우선 및 한반도의 현상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함
 - 즉, 6자회담의 장기공전 속에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까지 겹쳐, 미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시의 대북정책 실패와 6자회담 무용론이 본격 제기되기 전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압박 조치로 해석됨
 - 나아가 북핵 문제의 적극적 관심 표명을 통해 UN 안보리 상정을 위한 국제적 ‘명분 쌓기’ 의도도 포함된 듯함
 - 한편,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별개가 아니므로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면 6자회담에서 이 문제도 함께 다룰 방침임을 시사함
 -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 “안보리 회부는 참가국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함으로써 아직은 행동보다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함
- (주변국 반응) 한국과 중국은 북핵 안보리 회부와 경제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 일본은 6자회담 복귀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수단’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반대하면서, 미국에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명분 조성을 위한 유연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음
 - 한국도 UN 안보리 회부에는 반대하나,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 ... 남북관계에서도 “쓴 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은 양면적 입장을 표명

2. 향후 북핵 시나리오 전망

- (단기 전환점) UN총회가 개최되고, 가동 중단된 원자로에서의 폐 연료봉 추출 및 재처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9월이 1차 고비임
- 북한의 추가적 조치 이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반응이 관건이나, 북미 모두 즉각적인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북미 양자 모두, 북핵 문제의 UN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에 대한 효

과를 확신할 수 없고, 북한의 상황 악화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이 추가적인 악화 조치만 취하지 않는다면, 북미 양자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한중 정상회담(5. 9)과 한미 정상회담(6~7월중) 등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중재 노력이 보다 본격화될 것임
-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 중재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임

○ (향후 전망) 북미 양자간 입장 차와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북핵 문제는 긴장 속에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교착' 가능성이 높음

- (낙관적 : 조기 타결) 북미 모두가 상호 양보하는 경우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이 기대되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사찰 수용과 미국의 낮은 단계의 평화 공존(플루토늄 우선 협상 및 체제 보장) 선언으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는 경우임
- 이럴 경우, 주변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비롯하여 북일 수교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협의, 단계적 북미 외교 관계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논의의 출발은 3차 6자회담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3차회담에서 북한이 핵 동결 이후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핵 폐기 이행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북 중유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협의 개시, 잠정적 다자 안보 보장 제공 등을 제의한 바가 있음
- 이럴 경우, 6자회담은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간 지역안보협력기구로 발전되고, 남북관계와 경협도 급속히 진전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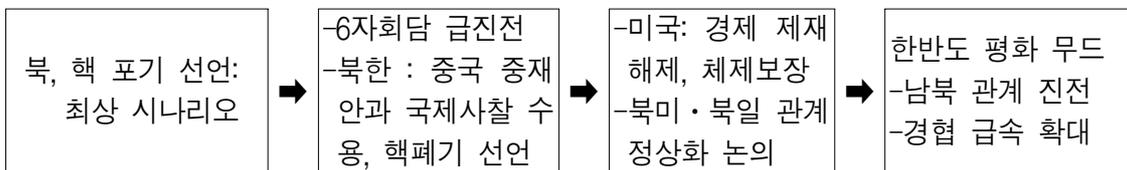
- (중립적 : 교착 지속) 미국의 다자간 압박과 북한의 버티기로 '氣 싸움'이 지속됨으로써 북핵 문제가 '교착 혹은 중장기화'되는 경우로, 한반도는 현재와 같이 긴장 속의 대치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 6자회담이 장기간 재개되지 않거나, 재개되더라도 북미간 입장 차와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경우임
-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조건 성숙론'을 제기한 만큼,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움직일 것으로 보아 당장의 6자회담 성과는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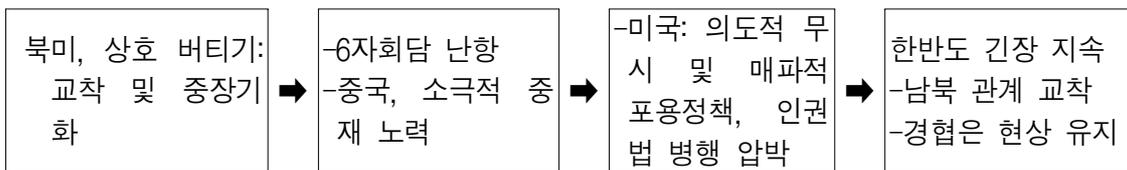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의 비난 발언 직후,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핵 문제의 해결도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 미국도 유화 중심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게 핵 개발 시간만 제공했다는 비난 등을 고려하여,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매파적 포용정책’(hawkish engagement)을 강화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미국은 UN 안보리 상정보다는 의장 성명이나 동맹국의 다자 틀을 이용하여 교역 품목 및 대북 송금의 제한, 북한 선박의 입항 검사 강화 등의 가벼운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단기적인 대응과 성과보다는 인권 문제의 국제화와 외교적 고립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시도할 것임
- (비관적 : 상황 악화) 북한이 한계선(red line)을 넘고 미국도 대북 강경책으로 맞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음

< 북핵 시나리오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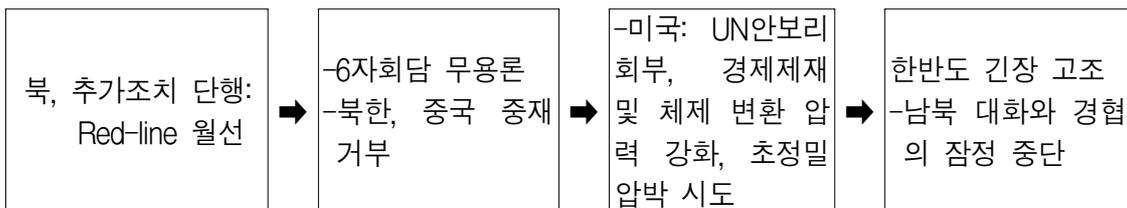
① 낙관적 전망 : 조기 타결



② 중립적 전망 : 교착 및 중장기화



③ 비관적 전망 : 상황 악화로 파국



-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고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나 핵·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제3국으로의 핵 물질 이전 등의 잠정적인 한계선을 넘을 경우임
- 미국도 전면적인 금융·경제제재 강화를 비롯하여, 해상 봉쇄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UN 안보리 상정, 나아가 국지적인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 단행 등의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미국의 중동 평화 우선 정책 추진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추가적 전쟁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 일본을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 역할 및 비용 분담 요구와 맞아떨어져, 일본으로 하여금 PSI 강화와 합동군사훈련 등을 촉발시킴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은 고조될 것임

3. 남북 관계 및 경협에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

- (영향)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추가적인 경협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과 속도 조절이 우려됨
- (남북 관계)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의 병행 추진 원칙으로 당국간 회담과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에는 차질이 예상됨
 - 2005년은 광복 60주년과 남북정상회담 5주년인 만큼,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려고 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당국간 회담과 예년 수준 이상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에는 차질이 예상됨
- (남북 경협) 북핵 문제의 추가적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지장이 없겠지만,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확대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미국의 조율 요구와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 없이는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협 확대에 차질이 예상됨
 - 이로 인해 개성공단 본공단의 분양과 조성, 금강산 지구의 휴양·숙박 시설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 등의 신규 사업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에는 바세나르 협약과 수출금지적 성격의 超관세 규정인 Column II의 엄격한 적용으로 전략물자 반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
- (대응) 북핵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균형 속에, 북한에게는 해결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핵 포기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함
 - 미국과는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확보와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인식의 격차를 축소함과 아울러,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또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의 틀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여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예컨대, 남북 평화조약 체결 하에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일·중·러의 보장과 미국의 묵인(2 + 3 + 1), 6자회담 속의 북미 회담(2 in 6)과 다자 틀 속에서의 단계적 북핵 해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은 핵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해결을 앞당기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 특히 남북 경험은 남북관계 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중국이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남북 경험 중단 등의 압박 정책은 그 효과는 물론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3669-4182)